

# KNSI REPORT

컨퍼런스

<제 16회 코리아포럼(전문가좌담회) 녹취록>

## 이명박정부 6개월, MB노믹스와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와 과제

일시 : 2008년 8월 25일(월) 08:30~11:30 / 장소 : 코리아연구원 사무실

- 1부: MB노믹스 평가와 과제 (08:30~10:00)
  - ▶ 사회: 임원혁(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KDI)
  - ▶ 토론: 김진방(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 전강수(대구가톨릭대 부동산통상학부 교수)
    -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2부: 이명박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와 과제 (10:00~11:30)
  - ▶ 사회: 김연철(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한겨레평화연구소장)
  - ▶ 토론: 임원혁(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KDI 연구위원)
    - 이남주(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이정철(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최: 코리아연구원

후원: 경향신문

※코리아포럼은 연구자-정책결정자-관련 전문가들이 실사구시적인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모색하고 지적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장입니다.

## ● 1부: MB노믹스 평가와 과제 (08:30~10:00)

- ▶ 사회: 임원혁(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KDI)
- ▶ 토론: 김진방(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전강수(대구가톨릭대 부동산통상학부 교수)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임원혁

지난 6개월을 돌아해보면 전반적으로 2가지 현상이 눈에 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식의 부재입니다. 이번에 건국절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현 정부의 역사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국절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개천절이 있는데 건국절이 왜 또 필요한 지 잘 모르겠고, 일부 연설문에서는 ‘2차 대전 이후 신생독립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괄목할 만한 성공사례’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1945년 이전의 역사는 완전히 망각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식의 부재는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정책 구상으로 연결됩니다. 아무리 지난 정부와 정치적 성향이 다르더라도 왜 지난 정부에서 그런 정책이 나왔는지 좀 따져보고 생각을 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의 후진화입니다. 구호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외치지만 실제 정책으로 구현된 것을 보면 70년대, 80년대식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뒤 메달리스트들의 귀국을 막고 도보퍼레이드를 한 것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정책은 사실 70년대에도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로는 선진화를 외치면서도 정책담당자들의 실제 생각은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정책의 흐름을 보면 오히려 후진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따져보면, 양극화라든가 경기부진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팽배해져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제는 살리겠다. 잘 살게 해 주겠다’는 아주 현실지향적인 공약을 내건 후보가 당선된 것이지만, 실제로 지금 정책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과거지향적인, 상당히 후진적인 정책들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70년대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아주 고통스럽게 확인해 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크게 보면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정책의 후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경제정책 자체로 들어와서 따져보면 큰 틀에서는 ‘747’이라는 선거구호가 있었는데 이게 대외환경 악화라는 현실과 부딪히면서 정책담당자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계속 대중적인 처방을 내리기에 급급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만은 살리겠다’는 대선 공약은 현실지향적인데 ‘747’은 상당히 비현실적인 구호입니다. 지극히 현실지향적인 선거공약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비현실적인 구호를 내세웠다는 것부터가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구호는 실제 정책집행단계에서는 경제안정을 해치더라도 팽창정책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면 된다는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효율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증대해서 ‘747’을 중장기적으로 실현한다는 식이 돼야 그나마 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을 텐데, 실제 정책집행

단계에 가면 효율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억지로라도 투자를 부추겨서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대신 경제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희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초기에는 금리인하를 독촉하고 원화의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외화시장에 개입했던 부분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해 물가안정이 지상과제가 되자 3월 말 정부는 70년대식 물가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언론에서 흔히 ‘MB품목’이라고 일컫는 52개 주요 관리품목을 지정하고, 전기와 가스 같은 공공요금을 동결한 것이었죠. 이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52개 주요 관리품목의 가격상승률이 일반물가 가격상승률보다 높아서 과연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공공요금의 동결은 처음에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포장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소비행태가 왜곡되고 1조 원이 넘는 재정 부담을 지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가안정을 도모한다고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한 달 사이에 외환보유액이 100억 달러 정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대중적인 처방에 급급하여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5월, 6월 들어서면서 촛불시위가 크게 일어나자 정부는 전기나 가스, 의료, 물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되었고, 또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철학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때 정치상황이 불리하게 보이니깐 일단 물러선다는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지지율도 10%대에서 30%대로 올라가니까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지는 불분명합니다.

요즘 국회개원과 관련해서 논의가 많이 되는 분야가 세금 쪽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정교한 분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려 주면 생산이 늘어나서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는 다분히 원론적인 차원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우려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을 돌이켜 보면 종합적 사고나 분석보다는 대중적 요법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온 것이고 앞으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본다면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지향하고 정책의 파급효과가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다고 보이는데요, 각론으로 들어가면 기업이나 금융, 부동산, 노동, 복지 분야에서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특별하게 추진한 일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 하나 구체적으로 나왔고, 기업 쪽도 감세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가 되고 있고요, 노동부문도 조금씩 비정규직 관련 법률이라든가 얘기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각론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기업부문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처음부터 현 정부가 친기업정책을 표방하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재벌총수 사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법집행에 있어서도 기업 친화적으로 하면서 대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의 확대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용확대라든가 투자실적을 보면 상당히 미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공공연하게 규제완화와 총수사면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대기업이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월관계가 깨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기업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 법인세 감면을 포함하여 세금부분도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김진방 교수님께서 우

선 6개월 동안에 기업 관련정책 흐름을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 김진방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선거당시부터 내걸었고 특히 당선 후에 명시적으로 내세운 ‘친기업’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몇 가지를 시도했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단계가 지금까지의 6개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6개월의 내용을 보기 전에 친기업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친기업을 통해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친기업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면 투자와 고용의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리라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친기업이라는 선물을 주면 기업이 그에 대한 보답으로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주리라고 기대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한나라당이나 청와대 일각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본인들도 친기업정책을 한다고 해서 투자와 고용의 수익성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그보다는 정부가 선물을 줬는데도 기업이 보답을 하지 않는다는 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명박정부의 본심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친 기업 정책이 투자확대, 고용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그것은 본심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명박정부가 친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정책들을 살펴봅시다. 그것들은 대부분 친재벌이라 부르는 게 더 적절한 정책들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가 대표적입니다. 출총제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는 이 제도는 재벌 기업이 국내 계열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재벌 총수가 가공자본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도를 해서 출총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주회사규제완화라든지, 대기업집단지정제도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때 거론되었던 상호출자금지 제도의 폐지는 당분간 추진되지 않을 듯합니다.

금산분리 완화 내지 폐지도 대표적인 친재벌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명박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금산분리를 규정하는 핵심 법률은 은행법이고 그 다음에는 금융지주회사법 그리고 공정거래법이 있는데, 아직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 금산분리와 관련된 조항들,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의 자회사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해서는 보험회사지주회사법을 따로 만들어서 보험회사에 대해 금산분리규제 적용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같지만 여전히 말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기업정책과 관련해서는 출총제를 폐지하겠지만 상호출자금지제도는 당분간 그대로 둘 것 같고, 대기업집단지정제도도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기업정책이 있습니다. 재벌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권보호장치 도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이뤄지는데,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추진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명박정부가 그것을 공개하고 논란을 일으킬 준비까지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권보호장치의 핵심은 차등의결권과 독약조항(poison pill) 두 가지인데, 재벌 쪽에서는 차등의결권보다는 독약조항을 훨씬 바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금융회사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부분을 우려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에서는 포이즌 필을 넣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나 아직 명시화 되지 않은 것이 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정책과 관련해서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출총제 등 재벌의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여러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 할 것이고, 금산분리와 경영권방어장치 부분에서는 방향은 정해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 일정에서는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임원혁

대통령이 듣기에 좋은 말 한다고 투자를 하고 듣기 나쁜 말 하면 투자를 안 하고 하는 이런 기업인상을 정부는 상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친기업정책을 통해서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자연적으로 투자와 고용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친기업정책을 통해서 규제완화도 해주고 총수사면도 해주고 일종의 선물을 주면 현재 경제 환경이 좋은 나쁜든 일단 선물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한 건가요? 정부가 상정하는 기업인상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 김진방

그게 저도 질문사항이고 주시를 하는 부분인데 계속 그 두 가지가 섞여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적어도 재벌규제와 관련해서 대기업규제, 경영권보호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명박정부도 그것이 바로 기업의 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을 통해 투자와 고용의 확대를 가져오리라고는 믿지 않는 것 같고, 일종의 선물을 줄 테니 보답을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는 참여정부도 그다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출총제 폐지 얘기가 나왔을 때 ‘출총제 폐지가 투자를 억제하지는 않으나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에는 장애가 되고 있으니, 정부가 이를 풀어 주면 재벌총수는 재벌기업의 투자확대로 보답하라.’는 것이 예전에 김근태 의장의 명시적인 발언이었어요. 당시 청와대와 재정부도 기업의 투자를 정부의 선물에 대한 재벌총수의 보답으로 여기고 기대하는 태도를 종종 드러내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명박정부에서는 조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규제완화, 공장종량제, 조세완화 하는 것이 있는데 수도권규제완화 같은 것은 상당히 마음을 먹고 추진하려 하려고 했으나 지방과 이해관계 갈등에 따라서 지금 전체적인 이유로 멈춰있고 있는 그러한 이유 같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부분은 쪽 들어가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세완화 같은 경우는 나서서 반대할 세력이나 집단이 별로 없었으니까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수도 있겠으나 재정 부분이 걸리겠죠. 그래서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는 미루겠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는 다른 세금의 인상 내지 정부 지출의 축소를 동반해야 하는데, 또 행정부로서는 지금의 이명박정부로서는 어느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멈춰거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특히 지방의 반발로서 수도권규제완화는 멈춰거리고 있는데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 조세인하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멈춰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대기업규제는 차근차근 눈치를 봐가면서 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평가를 하자면,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아까 말한 대기업규제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투자고용의 확대를 가져다주기 보다는 재벌체제의 강화, 경제력집중의 심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이명박정부는 전혀 위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벌주도의 경제성장, 그리고 재벌체제 강화를 통한 안정화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심히 위험스러운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경제력집중이 강화되고 재벌체제가 강화되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냐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인데, 이명박정부는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듯합니다.

## 임원혁

이것을 받아서 노동부문에 대해 이병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훈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선 앞서 사회자나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친 기업, 또 세간에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국정기조로 인해서 노동에 대해서는 일정한 편향성을 임기 초기에서부터 보여 주었죠. 노동하면 노동을 사고파는 사람들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에서 핵심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기업 편들기’ 라는 하나의 국정기조가 잡히면서 노동정책을 경제정책, 기업정책의 하위수단화 하면서 초기부터 나름대로의 자기 색깔을 드러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진행자가 말씀하셨듯이 과거회귀적인 성장, 개발연대시절에 노동이 단순히 투입요소로 관리하는 측면으로 성장위주의 노동통제, 노동관리 이었던 것이 21세기 현재 우리 사회의 대표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국정기조뿐만 아니라 인수위라든가 아니면 청와대 인선이라든가 그리고 부처관계에 있어서의 노동이 과거정부의 비해서 특히 참여정부의 비해서 굉장히 왜소화 되거나 아예 노동정책을 꾸러나갈 수 있는 인적구성을 스스로가 최소화하는 그런 식으로 정책의 편향성이 초기에 기조를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몇 가지 노·사간의 노동정책이 MB정부 내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왜소화 되고 있는 그리고 하위수단화 되고 있는 그런 식의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 우리가 6개월을 평가한다면 정권초기에 인수위나 현 정부가 밝힌 내용이 집행에 있어서는 촛불국면으로 인해 상당히 좀 지연되거나 내지는 본인이 내 걸었던 여러 가지 정책구상이 실현되지 못한 채 일단 유보되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깐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기조하고 그런 기조를 반영시킨 정책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하고 따져본다면 그것이 굉장히 의외의 촛불국면이라는 변수로 인해서 그런 내용이 초기서부터 상당히 우회된 가운데 6개월이 흘러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세 가지의 부채 내지는 세 가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정책의 현주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일 크게 다뤄 질 것이 일자리, 앞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일자리에 대해 전혀 대책 없이 이 문제를 크게 6개월 동안 심화시켰다 하는 것에 일차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해 대선 과정에서 ‘747’이라는 MB노믹스를 밝히면서 ‘매년 6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식으로 야심찬 공약을 밝힌바가 있다 2월말 정권출범하면서는 그런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여당, 여러 언론을 통해서 문제제기가 되면서 보다 현실적인 수치로 조정된 것이 35만개로 재조정을 해서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연간 35만개의 일자리창출의 계획이 지난 5월, 6월, 7월 물론 이것은 정부정책의 실패만 가지고 탓할 수만은 없고 경기적인 문제, 촛불과 관련된 여러 사회 문제들이 같이 작용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6월 7월에 일자리 창출이 14~15만개에 그쳐 정부가 공공연하게 밝힌 일자리 창출에는 반절에도 못 미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부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난을 야기 시키면서 소위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현 정부의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으로 경제 살리기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인데 일반 서민들에게 변변한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시름이나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부담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경제활동조사에 따르면 연간실적도 저조하지만 이로 인해서 잠재실업 상태의 사람이 200만이 넘는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되고 있듯이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으로나 정부 차원에서 무시하지 못할 크나큰 문제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사관계인데 사실 정부는 인수위 초기부터 촛불국면까지는 법치주의를 강조 했죠. 그랬던

것이 촛불국면으로 시민들의 저항에 굉장히 움츠러들면서 이 법치주의라는 것이 말로만 그치다가 이것이 잦아드는 7월 이후에 노동 쪽의 공안탄압의 형태로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이 설립된 이후에 전례 없는 지도부의 탄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수석위원장, 사무총장을 포함한 지도부 6명을 촛불과 관련된 정치과업을 했다는 이유로 지도부에 대한 수배를 하고 또 그 중에 수석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거를 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비단 이런 전례 없는 민주노총의 탄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여러 가지 활동을 정지, 무력화시키는 그런 식의 공공연한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치주의라는 것이 노·사 공히 공정한 법의 집행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앞서 지적했듯이 친 기업 정부답게 8.15특사에서는 재벌총수들에게 특별사면을 취하면서 노동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민주노총 손보기’ 하는 식의 배경에는 반노조정서 내지는 특히는 민주노총의 움직임이나 활동방식에 대한 나름대로의 반감이 크게 작용하면서 요번에 민주노총 버릇을 바로 잡겠다든가 아니면 뿌리 뽑겠다든가 하는 식의 움직임도 감지되기도 합니다.

법치주의와 관련해서 2번째로 주목 해야 될 것은 최근에 기륭전자, 코스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현상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정규직 활동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제 기륭전자는 장기파업에 처해졌고 코스콤 같은 경우는 지금 200일을 넘었고 KTX는 600일 넘었습니다. 이런 장기파업 문제에 대해서 과거정부는 문제해결에 나름대로의 노력을 보였는데, 현 정부는 법치라는 이름으로 이런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서 완전히 수수방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기륭전자 같은 경우는 노조위원장이 근 70일 단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노동부장관부터 시작해서 누구하나 움직임이 없이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손 하나 까다하지 않는 그런 식의 법치가 또 다른 사용자 편향 법치의 하나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직접적인 효과라기보다는 정부의 이런 법치주의의 편향성을 사용자가 나름대로 감지하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노사교섭에 있어서 사용자들의 강경대응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기륭전자, 코스콤 같은 경우 시정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배 짜라 하는 대응을 하는 것도 그렇고, 보건의로 산별교섭이라든가 금속산별교섭에서도 사용자가 참여정부 때 보여준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강경대응으로 해서 교섭이 장기화 된다는가 오히려 분쟁이 확대 된다는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7년 대비 2008년 동기간 파업건수가 특히 파업참여 노동자 수 내지는 생산손실일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참가자수라든가 아니면 생산손실일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 현 정부의 노동정책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분리대응하는 것이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이 현 정부와 정책 연대를 함으로 해서 협조를 넘어서 밀월관계를 가지고 상당히 공식, 비공식의 정책협약이 원활하게 되는 반면에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 정부가 노동계를 다스리기를 어떻게 보면 정공법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정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노·노 내지는 노·정간에 여러 가지 갈등을 키워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현재 일자리에 대한 대책과 노사관계에 대한 대책의 부재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정책적으로 뭘 하겠다는 식으로 말만 있지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소위 노동시장 규제를 무력화 하겠다 해서 규제완화, 탈규제로 지난해에 현 정부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대한상공회와 경제계로부터 여러 가지 규제완화에 대한 요청을 받고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 하나가 기업들이 바라는 노동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라는 요구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수용을 해서 노동부를 중심으로 제도선진화를 명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있는 비정규보호법이 지나치게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준다고 해서 사용기간을 더 늘인다거나 아니면 과견업종을 현재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현재 있는 고용의 유연성을 더욱더 친 기업 쪽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식의 변화가 보입니다. 노동시장의 규제를 그만큼 줄여나가겠다는 것은 공언되었던 거고 노사관계, 일자리 문제를 하반기에는 현 정부가 이 부분을 공세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란 그런 말씀까지 드립니다.

### 임원혁

법치주의에 관련해서 저도 좀 생각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법치라고 하면 질서 확립, 불법시위 근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법 앞의 평등’ 이라는 것이 법치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른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니라 대상이 누구든 법을 평등하게 집행해야 하는데, 요즘 정부가 내세우는 법치에는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부문에 대한 평가를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부동산 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정책이 하나 나오긴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한 것이 지방아파트 미분양사태 얘기를 정부에서 많이 하고 미분양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와 별로 관계가 없는 듯 한 수도권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이번에는 부동산 대책에서 빠졌습시다만 부동산 시장안정화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DTI나 LTV와 같은 금융규제까지 철폐한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전강수 교수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강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도대체 정책내용이 뭔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일관된 경향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후보시절 이명박 캠프가 보여준 경향은 일단 외형적으로는 ‘참여정부가 했던 것은 전부 영터리이니깐 모조리 뒤집겠다.’는 이런 태도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집권을 하고 보니깐 시장이라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그냥 큰소리 쳐가지고 해결 될 일이 아니고 현실이고, 이전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지지율을 까먹는 걸 봤기 때문에 조금 두려워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책을 당시 캠프 시절이나 인수위 시절에 얘기했던 것을 확 치고 나가지 못하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라는 말을 자꾸 앞에 붙였던 거 보면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주춤주춤 하는 상태가 계속 됐던 거 아니냐.

거기다가 청와대나 정부가 ‘강부자’ 내각이다 하는 비판이 비등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기존에 얘기해 왔던 걸 막 밀어붙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들으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건데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재산세 부담이 엄청 올랐다. 근데 그 엄청 올랐다는 것의 근거가 뭔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시다. 서울의 경우에는 28%, 전국적으로 18%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수치인데 그런 얘기가 흘러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중산층, 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보유세 강화 정책을 중단하고 재산세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결정을 이미 해버렸고요, 그런데다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미분양이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그것이 이제 수도권까지 미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드디어 평소에 마음먹고 있던 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21대책’이 나왔는데요. 저는 그 대책의 성격은 결국 건설경기를 부양해서 전체 경기를



부양해 보는 쪽으로 가보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단초가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아마 다 펼쳐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보 시절에 참여정부시절의 정책은 다 엉터리니깐 다 뒤 집겠다 이런 식이었는데 ‘8.21’ 대책에서는 이상하게도 신도시는 받아들였어요. 이거는 도대체 설명이 안 가는 정책인데, 아무튼 설명을 하자면 결국은 ‘건설업 프렌들리’, 즉 어쨌든 건설업을 유리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해 보겠다는 의도가 표현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6개월간은 그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까 임 박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철학이 뭔지, 상식적인 사람들이 ‘어 그래’ 라고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철학이 별로 없어요. 그 뿐 아닙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정권의 소재나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되는 장기정책이 있는가 하면, 또 단기적으로 시장을 조절하는 단기정책도 있고, 또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복지대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철학과 장기정책, 단기정책, 주거복지정책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책 세트라 나가야 이게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없습니다. 정책 세트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있다 두 번째 특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동산 장기정책의 핵심은 역시 ‘보유세 강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말로는 가격대책이나 시장대책으로 세금을 활용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시장 상황을 내세우면서 보유세를 후퇴시키려고 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장기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후퇴시키고 강화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단기정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다시 투기를 촉발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그 정책이 굉장히 불확실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재건축 규제 완화’와 ‘전매제한 완화’인데요, 저는 이걸 장기정책으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투기를 억제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 허물려고 하고 있어요. ‘재건축 규제’의 경우 소형 의무 비율이라든지 임대주택 의무 비율 같은 핵심은 안 건드렸습니다만, ‘전매제한’은 ‘8.21대책’에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건드렸습니다. 단기 정책 중 어떤 것은 완화해도 되고 어떤 것은 유지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이런 분석이 없이 그냥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미명 하에서 무차별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정책 추진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걸 뭐 일관되게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조세를 통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 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혐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종부세로 상징되는 ‘보유세 강화 정책’에 대한 혐오가 대단하고요. 한나라당 강남 출신의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앞장서고 있고 청와대와 정부는 박수치고 따라가고 조중동도 박수치고 지지하는 이런 형국입니다. 근데 이걸 ‘강부자’ 내각 논란에서도 나왔듯이 굉장히 미묘한 문제라서 대선 공약이나 인수위 국정과제만 해도 이 ‘보유세 강화 정책’ 무력화 혹은 ‘종부세 무력화’까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정도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문제, 장기 보유자 문제, 은퇴 고령자 문제를 거론했지 종부세의 근간을 허물겠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도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출범 후에 점점 더 이런 핵심이 되는 정책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렇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또 세대합산을 폐지해서 인별 과세를 하겠다. 또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해 버리고 재산세와 통합하겠다. 이것은 종부세 제도의 근간을 허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도가 됐고 논란이

되면 아직 당론이 아니다 뭐 검토된 바가 없다고 하면서 물러서고 그러다가 또 거론하고 물러나고 하는 일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진행되는 양상으로 보면 다음 번 수순은 '보유세 강화 정책'을 허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습디만, '보유세 강화 정책'은 재산세와 종부세 양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까 재산세 부담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활용해 가지고 재산세 동결하기로 당정이 이미 합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8.21대책'에서는 건설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혹은 건설업자 보유분 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제도에 대한 '구멍 내기'인데요. 여기 내고 저기 내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보유세 강화 정책'이라고 하는 큰 독을 허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번 수순은 아마 종부세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설업 프렌들리'인데 역대 정부가 경제문제가 잘 안 풀리고 경기가 침체되면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서 전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해 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는 냉온탕식이라는 오명이 붙었죠.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을 해결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8.21대책'에서 냉온탕식 정책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과잉이라고 하는데 신도시를 2개 더 개발하겠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인데,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건설업 프렌들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 대운하를 접었다는 게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대운하를 접고 난 다음에는 가지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으니까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지 않고서는 단기적으로 전체 경기를 부양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데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 또 부동산시장이 침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컨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세 가지 특징은 조세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혐오, 철학 부재 및 장기정책과 단기 정책의 구별 부재, 그리고 '건설업 프렌들리'의 노골적 표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임원혁

기업, 노동, 부동산으로 나누어서 지난 6개월을 평가 해 보았습니다. 약간 더 거슬러 올라가서 대선 전까지 가면 대선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서민들한테 거의 절망감을 안겨주고 사교육비 오르고 일자리 창출 잘 안되고 양극화가 심화돼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심판을 받았다”는 식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단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려면,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가 집값을 하향 안정화 하는 방향으로 가고 사교육비도 하향 안정화 하는 방향으로 가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양극화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식으로 가야 하는데, 실제 이명박 후보의 대선공약은 상당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후보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과정을 보면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계천이라든가 버스준공영제를 통해서 서울시장 시절에 상당히 유능한 인상을 주고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다는 인상을 주었던 거 같습니다. 그것이 한나라당의 핵심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간 유권자들에게도 어필을 하여,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물리치고 대선에서도 상당한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수위 출범 이후 여러 설익은 정책이 나오자 사람들은 집값이라든가 사교육비, 일자리, 양극화와 관련하여 이 정부의 정책기조 자체가 문제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전강수 교수님께서 '강부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책의 편향성에 인사 문제까지 겹쳐 지지율이 하락하

게 되었죠. 촛불시위를 거치면서 생긴 현상은 이명박 후보가 가지고 있던 유능하다는 인상이 완전히 깨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번역 문제부터 시작하여 협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면서, 유능하다는 인상이 깨지니까 결국은 지지율도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 정부에서 확보한 것은 지지율 20%정도인데, “핵심 지지층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결집해서 다시 한 번 뭔가를 해보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 이명박 후보 당선에 기여했던 중간 유권자들하고는 정치적인 성향이나 경제적인 지위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2%를 위한 증부세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약간 우려되는 것은 대다수의 중산층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핵심 지지층을 위한 정책을 펴면서, 마치 이 핵심 지지층마저 놓쳐 버리면 정권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자고 하면서, 점점 더 정책에서 집값이라든가 사교육비, 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악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정책을 평가하셨는데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각 5분 정도씩 간략하게 정책부문에 대해서 전망을 해 주시고 그리고 대안적인 과제랄까 정책방향이 이런 식으로 수정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진방 교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 김진방

아까 제가 이명박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지적한 것 중의 하나가 기업정책을 기업에 대한 선물로 여기고 투자, 고용확대를 기업 측에 의한 보답으로 여기면서 주고받으려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런 생각의 허구성을 빨리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나타나는 상황이 오히려 그 생각을 노골화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이명박정부는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만 드러낼 것입니다. 덧붙이면, 중소기업문제를 대기업문제 또는 재벌문제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전 정부들도 말은 많이 했으나 별로 성과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 중소기업부분인데요, 중소기업문제라는 것이 중소기업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대기업과의 관계의 문제임을 간과한 데 그 원인의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재벌체제 강화가 중소기업 문제를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처럼 계속 재벌체제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체제로 전환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정부가 내걸었던 금산분리와 관련된 것인데, 금산분리 완화가 단기적으로는 금융 산업의 확대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국영화된 은행들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외국자본에 넘기지 않고 국내자본에 맡기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기적인 것 입니다. 금산분리에 관해서는 단기적인 효과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나타날 효과를 염두에 두고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금산분리 폐지 내지 완화에 따른 재벌의 은행업 진출이 장기적으로 금융 산업의 발전 및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 그리고 우리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의 강화로 나아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저는 회의적 입니다.

### 임원혁

다음엔 이병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훈

노동관련 해서 행정부의 문제 진단은 전반적으로 매우 계급적이다 는 언급이 있었고, 무능하다란 식의 지적도 있었는데요. 아울러서 앞으로 전망하는데 빠트릴 수 없는 것이 특히 촛불국면, 쇠고기 협상과 관련 그것을 지켜보면서 현 정부의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가 오만, 독선, 일방독주식의 국정운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 노동관련 해서 노사관계라든가 이후에 추진될 노동시장규제라든가 이것이 현재 자기만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식의 독선적인 태도로 개혁이나 노동정책 추진이 나타날 경우에는 노·정간의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도 어려운 가운데 노사관계의 어떤 부담이 증가 되어지는 것을 내다보게 됩니다.

우선 향후전망을 해서는 현 정부가 그 동안 보여줬던 모습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고 봅니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법치주의란 것이 이를테면 앞서서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정부가 생각하는 법의 기준에 위배되거나 이탈되어진 것은 철저히 때려잡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이미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탄압이 있었듯이 앞으로도 그런 기조는 단위사업장이든 중앙차원에서 노사관계에서 그런 공안적인 태도, 법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공안적으로 노동에 대응하는 태도로서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현 정부가 보다 전면화된 노동정책의 기조를 하반기에 내 보일 것이라고 언급된 탈규제, 노동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위한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현재 국회에 여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깐 이를테면 지난 촛불국면과 같이 내부의 견제가 없는 상태에서 현 정부의 의도가 그대로 국회로 옮겨져서 이런 유연화가 상당히 큰 저항 없이 추진 될 그런 우려도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런 유연화 탈규제가 공공연하게 추진 될 경우에는 한국노총하고도 일정한 긴장, 갈등관계가 조성될 수 있고 노정간의 갈등이 증폭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이슈는 공기업 선진화를 둘러싸고 민영화 특히 또 아예 정부가 100% 할당식의 그런 구조개혁을 강행하면서 해당 공기업을 여러 가지 개혁대상으로 큰 손질을 보게 되면 해당 노동조합이 반발하는 또 다른 갈등의 발생소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앞으로의 정책 제언으로 말씀 드릴 것은 우선 국정스타일이자 노동스타일에 대해서 그만큼 정부가 기업경제정책의 하위변수로 치부되어 왔던 일자리 문제는 그 만큼 민생의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고 노사관계가 최근의 경기와 관련되고 사회적인 갈등부담인 점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이것을 전략적으로 보고 그리고 국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정책과 연계해서 보다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접근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국정스타일이라든가 이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위상을 부여한다는 것이 우선 요구될 바라고 생각되고요, 가장 일반 노동자들이라든가 서민들한테는 일자리 문제가 요구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해가지고 현재 수요를 같이 맞춰주고 그리고 수요로 일치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등 정부가 나서서 해 주지 않고서는 문제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이 소위 앞서도 투자가 늘겠느냐 란 문제가 지적되지만 투자가 늘든 그것이 고용으로 연결이 되겠느냐 란 식의 우리가 고용성장의 얘기를 경제 거시적인 차원이든 미시적인 기업차원이든 워낙 노동집약에서 기술집약적인 그런 식의 변화가 있어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따져 볼 것은 참여정부에서 그런 하나의 배경에서 소위 근로시간의 단축 일자리 공유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사회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 할 수 있는 그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라는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5만개의 일자리를 못 채우고 있긴 하지만은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는 양적인 접근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를테면 일단 비정규직일자리라든가 늘기만 하면 되지 하는 식의 노동장관 이라든가 국정담당자들의 얘기가 언론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고용의 질을 더불어 해결하지 않고 양 만의 접근으로서는 우리의 잠재실업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거죠. 사회에 고용의 질을 같이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식의 정책적인 접근을 함께 도모하지 않고서는 잠재적인 실업이라든가 일자리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즉, 양 못지않게 고용의 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에 대해서 전략적인 분리대응을 앞서 지적을 했는데 말 그대로 우리사회에 고질적인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 극복하려 한다면 노동조합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제까지는 전혀 사회적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노동조합과 함께 사회적 대화라는 그런 점에 현 정부가 뭔가 이전 정부에서 실패된 정책으로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그걸 무력화 하는 식으로 현재까지에 대응을 보여 왔는데 오히려 양극화를 극복하자면 정부, 산업계, 노동조합의 모든 사회적 주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열싸매고 나설 때 이 어려운 난제가 해결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특히 민주노총까지 포함해서 노동조합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그들과의 대화를 다시 복원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 임원혁

계속해서 전강수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강수

중요한 장기정책을 무시해 버리면 결국은 역사의 평가를 받게 돼 있거든요. 이명박정부가 그런 장기정책을 무시했을 때 따라오는 역사의 평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예컨대 다음 번 수순으로 생각하는 '보유세 강화 정책'의 무력화 이런 걸 해 버리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20~30년 거꾸로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역사의 평가를 어떻게 하려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가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다가 단기대책을 부적절하게 쓰게 되면 시장의 변동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증폭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깐 어떤 정책을 써야 될지 분간을 못 하기 때문에 시장 변동의 진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지난 정부 때 거품이 형성되는 것은 어느 정도 억제했다고 보는데 지금 잘못된 단기정책을 쓰게 되면 거품이 더 확대되고 나중에 이게 터져서 붕괴하는 일이 올 수 있다. 그런 일이 이 정부의 임기 중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예컨대 신도시 2개를 더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과 맞아 떨어지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데 여하튼 장기정책도 허물고, 단기정책도 굉장히 부적절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정적인 전망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우선 이제 6개월 지났으니깐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기초 위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가 된 거 아니냐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유세 강화 정책'은 절대로 후퇴시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참여정부만 했던 게 아니라,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 다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그러다가 중도에 좌절하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정책인데, 노무현 정부가 천신만고 끝에 그것을 정착시켜서 이제 갓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이 정부가 이것을 완전히 허물려고 한다면 이것은 아까 임 박사님께서 정책의 후진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정말 정책의 후진화라고 봅니다. 오히려 하려면 좀 더 강화된 형태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이 정책을 추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지금 보유세 강화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

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장기정책을 무력화시킨다면 나중에 부동산 정책을 20, 30년 후퇴시켰다 하는 역사적 평가를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단기대책인데요. 단기대책을 제대로 쓰려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꾸 정치적으로 하려고 해요. 굉장히 위태로운 건데요. 지금 지방에 미분양이 많다 이걸 일부 대구 지역이나 이런 곳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수도권 미분양의 물량이 넘친다 이거는 안 그런 것 같거든요.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막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안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 진단을 기초로 해서 적절한 단기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전매제한은 모르겠습니다만 재건축 규제에서 소형 의무 비율이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투기 촉발력이 크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하나는 다들 이걸 위험스럽게 봅니다만 저는 오히려 미시적인 금융정책 LTV나 DTI 정책 이런 것은 전면적으로 풀면 안 되지만 약간씩 수치를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다면, 이걸 약간 풀어줘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침체로 가서 경착륙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놔두고 나머지 핵심적인 규제들을 막 풀어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정부에는 주거복지정책이 없어요. 그러니깐 ‘지분형 주택’ 이런 것도 했다가 접어 넣었고요,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했는데 이걸 유명무실 해졌고요, 그렇다면 이 정부에 주거복지정책이 없습니다. 중산층 이하 서민들 주거 빈곤층들을 위한 정책들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지난 정부 임기 중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든지 ‘환매조건부 주택’이라든지 또는 참여정부에서 또 민주노동당에서도 그런 개념이 나왔습니다만 ‘소득분위별 맞춤형 주택정책’ 같은 주거복지정책이 있었는데 내용이 괜찮아요. 그런 거 좀 갖다가 배워서 제대로 된 주거복지정책을 속히 마련해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원혁

1시간 반 동안 지난 6개월 동안의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같이 자리를 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 2부: 이명박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와 과제 (10:00~11:30)

- ▶ 사회: 김연철(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한겨레평화연구소장)
- ▶ 토론: 임원혁(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KDI 연구위원)  
이남주(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이정철(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송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연철

먼저 6개월의 전반적인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대부분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통일·외교 쪽에서 참혹한 결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결과들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돌아가시면서 6개월의 전반적인 느낌이나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원혁

전반적인 느낌은 외교라는 것이 국익이 있고, 전략적 이해라는 부분이 있고, 또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제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외교 문제를 국가 간의 우의라고 할까요? 감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상당히 순진하게 풀어 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많이 겪었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기본적으로 역사의식이 부재한 데서 온 것 같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동북아 정세 전반을 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북핵문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외교를 전개하면서 키워 왔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어떤 것이 중요한 문제였고 대안은 어떤 것이 있었고, 그 대안들 중에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왜 특정한 정책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교관계라는 것이 정상 간의 인간관계만이 아닌 것이고 국가의 전략적 이해와 주변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너무 우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남주

일반적으로 진보세력의 외교에 대한 태도가 이념적이다, 이상적이다 그렇게 얘기 하는데, 방금 전에 국가 간의 우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보수를 추구한다고 하는 정부가 외교정책에서 오히려 더 이념적이거나 어떠한 측면에선 굉장히 순진하게 국제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동안 냉전이후에 변화되는 국제정세, 특히 동북아 지정학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인식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중관계에서 그런 예를 하나 들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쪽에서 많이 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지난 10년간 한중관계가 너무 나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가있는 것은 사실 정부 간의 관계가 많이 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한중교류자체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중관계는 경제적, 문화적, 인적 교류의 측면에서 일종의 압축성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냉전체제에서 놀렸던 스프링이 튀어오르는 식의 변화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히려 정부 간의 관계가 이러한 빠른 협력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최근 한중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합의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전략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협력의 내용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민간부분에서 빠르게 확대되는 변화를 따라잡는데 급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평가하는 것이 더 현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양기호

저는 일단은 이명박정부의 외교라는 게 6개월 평가를 하자면 역시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 이유로 일단은 정권에서 10년간 밀려있었다는 거, 정권을 그 동안 10년간 운영하지 못했던 국정운영 경험부재라는 게 있고, 또 하나 그 동안 한미관계, 한일관계가 특히 악화 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걸 복원시켜야 한다는 반작용 같은 게 굉장히 강했던 거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전략적이고 치밀한 외교 전략이 부재했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실용외교, 선진외교 라는 게 사실 뭐랄까 아직까지는 이론중심이지, 이게 내용하고 결부 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나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사령탑이 부재하였다는 것은 자주 있는 지적입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튼 그 동안에 특히 한일관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2005년 3월에 독도 시네마 현에서 독도의 날 조례제정 한 다음에 거의 일 년 반 이상이 부재된 상태였거든요. 장관급이상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정부가 한미관계 또는 한일관계를 어찌 됐던 간에 다시 한 번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은 그것은 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이정철

이명박정부가 남북관계에 관해서 밖에서 보는 관점은 그런 정책들을 실행하고자 했는데 확실히 안과 밖이라는 게 많이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밖에서 비판을 계속 해오던 것이 사실은 정책구조에서 소외돼 있던 거기서 나오는 문제라 할 수 있을텐데, 그것을 안에서 정책으로 실행을 막상 해 보니까 의도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전반기 내내 전개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 보면 여, 야 모두에서 한편의 코미디 같은 사건들이 상당히 이어진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10년간 자유주의 정책을 폈다는 과거 여당도 금강산 사건 났을 때 첫 코멘트가 왜 대통령이 금강산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제의를 하느냐 라고 비판했는데 사실은 자기네들 노선대로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제기 한 것은 환영한다고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여, 야 간의 대립이라는 게 그냥 자리만 바꾸는 이런 측면도 있고, 그러면서 좀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여, 야간 대립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들이 남북관계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좀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밖에서 바라보던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게 밖에서 바라보다 보면 한·미 관계에 대해 굉장히 피상적으로 보게 되는데, 부시행정부가 대북정책을 펼 때 상당부분은 노무현 정부 다루기 측면에서 강경하게 대응한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을 과거 야당 시절에는 마치 한·미간의 갈등으로만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실제 자기들이 여당이 됐을 때 미국의 대북정책의 본질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연철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각 분야별로 전략적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미관계와 관련된 것은 한미전략동맹이 있는데요, 정치인들이 굉장히 현안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깊이 있는 고려 없이 명분에 치우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쇠고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격투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한미전략동맹 구상에 대한 평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원혁

한미관계의 전략과 기초측면에서 보면 참석자분들께서도 얘기 했습니다만 우선 ‘한미관계를 복원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미관계를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승만 정부 때 한미관계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케네디 대통령 때도 아니고, 다만 존슨이랑 박정희 대통령 때는 베트남전도 참전하고 하면서 한미관계가 좀 괜찮았지만, 냉정하게 볼 때 언제 제일 좋았냐 하고 생각을 해 보면 김대중 정부와 클린턴 정부 때입니다. 그럼 한미관계 복원의 실체는 김대중 정부와 클린턴 정부시대의 한미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냐고 하면, 현 정부 관계자는 완전히 손사래를 치겠죠.

2001년부터 우리나라와 미국,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쪽에서 변화가 생겼다고 보다는, 미국에서는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정책이 바뀌고 일본에서는 고이즈미가 들어서면서 역사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결국 한국과 미국, 일본이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달라져 갈등이 생기고 마찰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우리 쪽의 잘못으로 정상들 간의 우의가 깨어지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취해왔던 정책을 갑자기 변화시켜서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현 정부의 역사의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미동맹 강화, 전략동맹 추진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한미동맹 강화를 왜 하느냐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면 뿌리 깊은 사대주의 비슷한 게 깔려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미국이 우리의 동맹이고, 미국이 한국전쟁에도 참여해서 우리를 구해줬고 앞으로도 미국을 계속 붙잡고 가야 중국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러시아, 일본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아주 뿌리 깊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제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체 국력이고 그 다음이 외교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동맹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기본 입장은 있는 것이고 미국의 기본입장, 다른 나라의 기본입장이 있어서 그 입장들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를 추종한다는 개념인지 이것부터가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만약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과 전혀 마찰이 없도록 하겠다면, 이걸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의 정책을 전적으로 추종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일본도 미국과 동맹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일본과 한국 간에 어떤 입장 차이가 있을 때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그리고 그 경우에 한미동맹만 외치고 갈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제기 되어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고려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고 한미일 삼자 가상동맹 같은 얘기들을 꽤 했습니다만, 독도문제가 불거지면서 현실은 생각했던 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한미전략동맹과 관련해서는 인수위 때는 전략동맹 선언을 하는 데 아주 적극적이었다가 막상 첫 한미정상회담을 할 때쯤 되니까, 부시 대통령이 임기 말이고 올해 11월이면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물러나는 정부와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전략동맹 선언을 한다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조금 현실적인 분들은 전략동맹을 했을 때 과연 추가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결국은 전략동맹선언이 안 나오고 그냥 정상 간의 성명을 비슷하게 맞추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점들이 역설적으로 미국에 실망감을 좀 가져온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출범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다르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한미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

고,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가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조니까 미국 쪽에서는 이명박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거의 전적으로 다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막상 전략동맹 선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니깐 실망이 꽤 컸던 것 같습니다.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하여 이명박정부는 미국에 대해 우리가 성의를 보이면, 선물을 줘서 분위기를 띄우면, 우리도 뭔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의 가장 극적인 예가 쇠고기 협상 문제입니다. 사실 한·미FTA는 이명박정부만의 작품은 아니고 흔히 ‘노명박 정부’ 라고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됐던 것인데,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한·미 FTA가 정체상태에 있으니깐 쇠고기를 양보하면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쇠고기 협상과 관련하여 농림부는 물론이고 외교부 내에서도 일부는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고, 실제로 합의 타결 발표 11시간 전까지만 해도 민동석 대표가 한국과 미국 간의 입장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될 지도 모르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결국은 미국에 가 있던 대통령과 참모들의 새벽회의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미국의 요구를 다 수용한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요구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것은 미국 내 전문가들조차도 왜 한국이 그렇게 전향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수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지적하는 것이 뼈 붙은 쇠고기를 수입을 하되 30개월에서 자르고, 그리고 특정위험물질 SRM 7개에 내장까지 배제하면 위생보건과 관련하여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한미관계 진전에도 도움이 될 텐데, 뭐하러 한국 정부가 30개월 율령제한 철폐하고 SRM 관련해서도 광우병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으로 나갔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쇠고기에서 화끈하게 양보를 해 주면 FTA 진전이 있지 않겠는가 기대를 했고, 또 한미정상회담 처음 하는데 분위기 좀 띄어보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FTA 협상과정을 보면 미국 쪽에서는 전형적인 살라미전술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FTA 협상 개시 전에 4대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먼저 철폐가 됐고, 쇠고기 협상도 앞으로 한·미FTA가 체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가 먼저 양보를 한 셈이죠. 한·미FTA 개시 당시에 우리 쪽 일부 전문가들은 전문직 비자 쿼터나 섬유 쪽에서의 미국의 양보를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은 양보를 받아내지 못했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양보만 받아냈죠.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 하면서 살라미전술 식으로 하나하나 쳐서 미리 받아낸 것입니다. 노명박 정부가 너무 순진했던 것이죠.

독도문제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이 역시도 순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른바 부시대통령의 결단으로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지정됐었던 조치가 철회되자 거기에서 얻는 교훈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역시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일본과의 외교싸움에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에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식으로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그렇게 믿는 것인지 아니면 선전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만, 사실 독도와 관련해서는 부시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시위 군중이라도 나오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깐 조치를 철회한 측면이 강하지 정상 간의 우의관계가 강화되어서 그랬던 것은 아닌데 이 역시 너무 순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과 기조에 있어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은 대북정책 관련 한미공조관계입니다. 이명박정부는 2001년 당시 부시행정부가 표방했던 ‘대담한 접근법’을 복원하는 쪽으로 나서다가 지금은 조금은 입장이 불분명한데 대북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이 앞으로는 중요한 과제가 될 거 같습니다.

## 김연철

역시 한국외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깐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서 결합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일단은 일본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한데

한미전략동맹과 관련된 중국의 불만이 부분들이 저번에 정상회담 할 때 중국 쪽 외교부에서 아주 명백하고 직설적으로 비판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 한중정상회담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된 중국의 입장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등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주

한중관계야 말로 이명박정부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후보시절과 당선자 시절에 계속 한미동맹의 강화를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로 강조하고 나섰으니 단기적으로 한중관계에서 약간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국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표현을 쓰던지 그것에 대해서 중국이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은 온갖 성향을 가진 정부들과 외교를 해온 나라입니다. 냉전시기만 보아도 반미도 해봤고 친미도 해봤고, 친소도 해보았습니다. 냉전 이후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지요, 그 과정에서 사실 중국이 지금까지도 외교정책을 가장 중시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어떻게 서로 맞춰 나갈 것이냐 인데 근데 그걸 우리정부가 맞출 수 있는 어떤 태도와 인식이 존재하느냐 이런 것이 사실은 제일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성향을 달리하는 정부가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를 조정해간다고 한다면 초기의 약간의 혼란은 있겠지만 다시 정상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탐색, 조정과정에서의 조율문제라고 긍정적으로 이해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탐색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카드나 내용들을 이명박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고 제시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를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저는 지금까지는 특별한 전환점들이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분명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종종 중국 쪽에서 우회적인 불만의 표시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제일 문제냐? 제가 보기에는 한미관계를 한중관계의 '대체재'로 설명하는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한중관계는 너무 나가있으니까 조정하고 한미관계는 그동안 한중관계에 비해 갈등이 많았으니 강화한다는 식으로 설명할 경우, 중국은 한미동맹을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외교관계에서 말이 앞서는 것은 우리 같이 여러 대국들을 상대하여야 하는 경우 매우 커다란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엔 미국에 대해서 괜히 말로 세계 이야기 하고 나서 미국과 신뢰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것이 임기 내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들어주고도 한미관계가 가장 나빴던 시기라는 공격을 받았지요.

새 정부에서 한중관계와 한미관계를 '대체재'로 잡고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중국이 한중관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태도로 나오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MD랑 대북정책이겠죠. MD는 제 생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는 관리는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국은 의심은 걸지 않고 혹시 이명박정부가 어떤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 정도를 가지고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 이명박정부도 MD가

한중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의식 하고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북관계가 될 텐데 대북관계 문제는 이명박정부가 지금 하나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무슨 딜레마냐면 6자회담 이후에 국제관계 속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만들어 졌습니다. 로드맵이 있는 거죠. 그 로드맵의 핵심은 뭐냐 하면 초기서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지만 핵 폐기로 가는 목적에 합의한 동시에 이는 북한의 체제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같이 해결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지키며 가는 것이지요. 이명박정부의 딜레마는 이러한 국제적 합의와 자신의 대북정책이 아직은 출동하는 측면이 많다는 점입니다. 노무현 정부까지는 이 양자는 기본적으로 일치 가 됐었죠. 근데 이명박정부 스스로 내놓은 대북정책, 비핵·개방·3000의 경우에는 명백히 북한에 선택폐기를 규정하고 있어요. 명백하게 선택폐기를 먼저 제기한 이명박정부가 6자회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며 동시에 대북관계에서도 당분간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면 6자회담은 중국정부가 내세우는 중요한 외교적 성과 중의 하나인데 중국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적지 않은 불만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중국에서는 정상회담 할 때마다 계속 남북관계 얘기가 나오는데 항상 어떻게 얘기 하나면 어떤 한국의 대북정책에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 들었다는 것이고 자신의 입장을 따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동성명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깐 문제는 계속 남아 있는 것이며, 이 문제를 이명박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한중관계의 실질적 진전 여부가 좌우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한미동맹을 얘기하면서 ‘가치동맹’이라는 이야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파악하기 어려운데 중국으로서는 매우 불편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치동맹에 중요한 문제가 인권문제일텐데 이를 단지 북한에 대한 고려만을 가지고 사용했다면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이러한 입장을 강화할 경우 또 다른 가치동맹의 출현을 보아야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동북아에서 가치동맹이라는 방식으로 관계가 규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도 실질적인 내용을 갖지도 못하면서 주변을 자극하는 결과만을 낳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6개월 동안에 보면 한중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라고 양국관계를 규정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초기에 발생했던 마찰들을 해결할 만한 적절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런 마찰의 불씨들을 아직 안고 가는 관계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되면 한중관계는 실무적으로 교류는 되어 있겠지만 어떤 오해를 불식하고 신뢰를 높여가는 단계로 발전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한중정상회담을 왜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올림픽 폐막 이후 중국은 오늘서부터 내일까지는 올림픽뉴스로 다 도배가 되고 한국도 올림픽 선수단이 개선했다고 해서 다 도배가 되고 할 텐데 왜 이때 와서 정상회담 하고 공동성명 내는 것이지요? 중국에서는 올림픽 하고 했으니깐 상해협력기구 정상외교를 마친 이후 하자고 했는데 한국에서 해외순방순서에서 앞으로 당겼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을 중시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하였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방식은 중국과 어떤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한중관계를 좋은 것으로 포장하는데 더 신경을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후진타오의 방한은 반한감정문제 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내의 반발과 같은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이벤트와 결합될 수 있는 것인데 한중정상회담이 이렇게 다른 대규모 행사에 가려지고 진행될 경우 언제 다시 한중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 김연철

이남주 교수님 지적하신 거는 일단 6자회담 프로세스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이 충돌되는 점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핵심은 비핵·개방·3000 구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구상이 남북관계의 교착이나 중간에 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들이 있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이정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철

일단 이명박정부는 지난 10년간의 자유주의정부의 대북정책을 현실주의적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대표적인 담론들이 갑과 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미·일 동맹 강화, 김태환 합참의장의 발언 같은 경우는 체적적인 감정 표현, 이런 레토릭들이 정권초반에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현실주의적인 대북정책을 쓰겠다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던진 거 같습니다. 근데 실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연설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연설들과 또 큰 차이가 없는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번 8·15 경축사 보니까 경제공동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것은 자유주의적인 접근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주의적인 정책과 자유주의적인 레토릭들이 계속 충돌하는데 실제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느냐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자유주의적인 요소의 대남정책이 아니냐. 남쪽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설득의 요소지, 대북정책의 요소가 진행되고 있는 거 같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거기서는 이제 모순이나 충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모든 지난 10년의 정책들을 지지하는 듯 한 발언을 하면서도 딱 두 가지만을 수용하지 않는 10.4와 6.15 관련 발언인데, 전형적으로 대북정책이 아니라 대남정책에 가깝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정부는 사실상 6자회담 내에서의 남북관계에 만족하고 있는 듯 한 인상을 줍니다. 최소한 앞으로 1년간은 그러리라 봅니다.

근데 저는 그게 한 가지 실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6자회담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난 7년간 쪽 진행되면서 보상에 의한 강제의 협상 틀로 굳어진 것이 많습니다. 미국의 단순한 억지전략을 넘어가지고 대북 핵 폐기라는 강제를 위해서 보상을 제공한다는 합의 틀이 만들어 진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명박정부가 6자회담 내에서의 남북관계를 계속 고집하게 되면 사실은 한국정부가 보상의 틀 내에서 자기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정부가 보상은 하면서 사실은 대북정책에서 실제로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는 그런 교착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자회담 내에서의 남북관계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보상은 보상대로 제공하고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계속 가는 구조를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연철

일단 한일관계를 풀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명박정부의 6개월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최근에 독도문제였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추구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합리적인 평가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 정책의 지향점하고 독도 문제를 초래하는 어떤 상충점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던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기호

전 정부를 한마디로 남북중심의 외교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명박정부의 외교는 한미중심의 외교가 아닌가 하

는 생각이 듭니다. 미 파워도 그렇고 정책의 지향점도 그렇고 그러니깐 일본이나 중국전문가가 의원연맹내에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한·일의원연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대교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한일관계는 시민민간교류차원 교류가 굉장히 확산 되 있어서 안전판이 있습니다. 근데 한중관계는 보다시피 중국 내에서 견장을 수 없는 반한감정이 나오게 되면 그걸 자체할 수 있는 어떤 안전판 같은 게 부재한 상태고요 그런 면에서 한중외교는 치열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일 외교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 한미관계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본질적으로 안정된 기반이라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한일관계에서도 독도문제가 있고 한중관계에서도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선진외교 라는 게 노무현 정부가 그 동안 동북아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선진외교로서 앞으로 아시아의 교류를 하겠다. ODA 하겠다 미군하고 같이 UN전략회의에 참가하겠다 PKO 파견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상황이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거든요. 이 문제 자체를 잘 풀어야 처음에 지향했던 선진외교가 5년 임기 끝날 때쯤에서 결과가 보이고 한국의 외교직행 이라는 게 동북아에 상당한 정도로 확산됐고, 확대됐고, 심화됐다는 결론이 나오게끔 되려면 적어도 이 상황문제는 어느 정도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서로간의 오해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불일치 점도 있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나 안보문제에 있어서 한·미·일 관계를 강조하는 것에 덧붙여 내려가지고 적어도 주한미군의 자체에 대해서 중국에서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북한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통일이후에는 주한미군이 이남 한반도 남부에서 주관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그 자체가 안전판 기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미·일 동맹을 통해가지고 일본의 군사력 확대를 억제하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합의(consensus)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안보측면에서는 한·미·일 강화하고 또 단지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에 대해서는 한·중·일관계의 경제파트너십, 한·중·일의 문화공동체, 경제공동체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약간 분리되어 나가면서 대립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독도문제를 본다면 저는 이게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것으로 이명박정부를 맹렬하게 비난 할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정권 있는 다음에 반드시 터졌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깐 일본은 90년대부터 우경화가 계속 되어 왔고 우경화가 세대교체하고 같이 진행이 되면서 왔는데 일본 우파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뭐냐면 영토, 역사, 교육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 쉽게 풀어보면 영토가 독도 문제이고 역사는 야스쿠니 참배고 교육은 교과서거든요. 그래서 교육기본 개정해 왔고 그 다음에 아베정권에서 일본군 위안부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되는데 전력 저지해 왔고, 위안부 자체를 거부해 왔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독도문제와 2005년에 고이즈미 때 야스쿠니참배문제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고,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일본외교는 독도문제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는 전략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건 뭐 전후 일관된 정책입니다. 정권하고 상관없이 계속 되어 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예를 들면 금년 11월에 총선이 있을 지 내년에 있을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민주당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것은 안 바뀔 것입니다. 독도 문제, 야스쿠니문제, 그 다음에 교과서 문제는 크게 바뀔 전망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국제파트너 우파의원들이 중진으로 올라서 있어서 이 문제를 뒤집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면 일본외교는 일관성, 지속성, 전략성이 있는데 문제는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적어도 독도문제에서 한국이 이렇게 언론이나 국회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어 대는 것은 안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 일본 우파들이 노리는 것이고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적절한 대응전

략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명박정부에서 이미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중·일간의 역사 교과서 공동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아예 독도문제를 동북아재단에 독도연구소를 만들었으니깐 자료를 캐치 해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하고 싱가포르에 있었을 때 영도분쟁에는 중요시점(critical date)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사람들 주장하는 1953년 이전의 과정에 대해서만 전부 다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독도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도 굉장히 특별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식민지하고 피 식민지간의 영토분쟁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적어도 피식민지국가들끼리 분쟁이거나 아니면 식민모국끼리 분쟁했지 식민지국가하고 피식민지국가간의 문제가 없었던 것이고 이것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다뤄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깐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독도문제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 제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일본TV에서 코무라 외상하고 토론한 적도 있거든요. 토론에서 계속 그것을 강조해 왔고 저는 그것을 피부로 느꼈어요. 이것은 완전히 2~3년 전부터 일본정부 내부에서 거론된 문제이고 이것은 일관성 있는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이걸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독도문제는 독도문제대로 자료수집하고 해외로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한국의 입장을 알리고, 이번에도 북경올림픽 폐막식 할 때 전부다 Sea of Japan 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계지도가 폐막식에 나오는데 동해가 전부다 일본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주변 국가들에서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도를 넓혀가면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장기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9.22 일 날 한·중·일 회담이 일본에서 열리는 데 그때 뭐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무조건 참석해야 합니다. 이 독도문제에 관한 것은 계속 한국에서 끌고 가가지고 양국 간의 쟁점을 삼으면 삼을수록 한국에서 득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나온 자료가지고도 충분히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 갈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승산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독도문제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상당히 승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면보단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대일무역적자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에 254억 달러, 작년엔 295달러, 지금 올해 상반기 170억 달러, 올 연말로 가게 되면 미니멈 350억 달러 그러니깐 지금 우리가 홍콩하고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고스란히 일본에게 갔다 바쳤어요. 전에는 중국에서 1억 달러 벌어가지고 일본한테 6천만 달러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루 1억 달러 벌어다가 일본에 1억 달러 바쳐야 됩니다. 중국, 홍콩 합쳐가지고 350억 달러를 말이죠. 우리가 지금 무역적자 100억 달러라는 것은 완전한 대일무역적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나름대로 대일 전략을 가지고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가져 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 김연철

일단 사실 독도문제를 다루는 이명박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일반시민들의 의구심이 이런 거 같습니다. 역사인식이 좀 부재한 거 아니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하면 지금 현재 보면 건국절 논란이라든가, 뉴 라이트의 식민지근대화론이라든가 일종의 항일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굉장히 역사의식 부재한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독도문제는 영토문제이면서 동시에 역사문제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일련의 역사 재해석에서 뉴 라이트 쪽의 역사재해석을 보면서 독도문제에 대한 진정성이랄까 그런 문제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 부분을 교수님께서 정책내부에서의 구조들을 설명을 해 주신 거 같은데 오히려 바라보는 어떤 시각

이 부분이 우리 내부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니겠는가 합니다.

### 양기호

저는 상당히 그것이 재미있는 지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여지는 있죠. 이명박 자신이 굉장히 뉴라이트의 지지를 받아왔고 또 굉장히 비즈니스프렌들리 된 사람이고 이 영토문제라는 것은 도리어 극단적인 협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상 지난번 일본의 여러 신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번엔 기다려 달라는 발언이라든지 그런 정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의심을 받을 만한 여지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영토문제로 가버리면 한국에서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깐 어디까지나 이 독도문제에 관한 것은 역사문제이고 더구나 이게 사실은 가만 뒤도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2010년이 한일합방 10주년이거든요. 저는 이따 제언 하려고 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한일관계가 진척될 체계가 특별히 안 나올 경우에는 일이 걸잡을 수 없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다 2011년 들어가면 레임덕현상이 되어갔고 그러면 결국은 별 효과 없을 것이고 최악의 스토리는 한일관계가 노무현 정부 때하고 글썽 크게 진전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미 한일관계에서는 불신감이 생겼거든요. 이게 한번 생기면 그 다음부터 일을 못 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안전관에서 불신관계를 넘을만한 어떤 구조라는 것은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내부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걸 뛰어넘을 만한 한일공동의 어떤 프로그램이 협력 또는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2010년 가버리면 그건 완전히 휩싸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1년 가면 레임덕 되가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무역적자만 엄청나게 안은 채로 한일관계 별 진전이 없이 영토문제가 더욱 확대되는 그게 2011~12년 시점이다. 굉장히 그것은 최악의 상태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이냐가 필요한 거죠.

### 김연철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 구조와 사람부분입니다. 사실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전략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하느냐 인데요. 그리고 정책이 결정되는 구조라는 게 문제점이 크다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돌아가면서 정책결정구조에 대한 평가하고 그것을 수행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미관계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원혁

정책결정구조를 국내로 한정해서 볼 것이냐 미국까지 포함해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담론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책결정구조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치동맹이라는 것은 원래 근원을 보면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에 과거 냉전시대처럼 쉽게 편을 가르기가 쉽지 않으니깐 인권문제와 결부시키고 그렇게 한 측면이 있는데 그걸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 과거 일본의 아베 정부 때 나온 '자유와 번영의 호'처럼 가치동맹에는 중국붕쇄라는 시각도 들어가 있는데, 이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치동맹을 동북아 쪽에서 보면 결국 중국과 북한, 러시아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태도가 내재되어 있는데 그걸 그냥 미국에서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남북관계에 관련해서 미국에서 담론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남북관계도 보편주의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북한을 일반국가 대하듯이 하라는 두 개의 코리아론입니다. 그것을 수용해서 남북관계도 국가 간 관



계처럼 하라는 것인데, 남북관계에 대해 조금만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면 이견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이미 명분화된 것처럼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인데, 민족사적인 관점에서의 특수성을 완전히 망각하고 보편주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정책결정구조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조직 쪽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부총리를 없애고, 경제사회등 통일외교안보등 사령탑을 없앴습니다. 그 함의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 입장에서야 번거롭게 중간 관리 층을 몇 겹으로 두고 그러냐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 정부에서는 이슈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여 조율을 하고 정치적으로는 어떤 문제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한테 직접 튀지 않도록 부총리를 둔다든지 사령탑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 버리니깐 지금 통일외교안보 쪽에 사령탑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정책조율도 약한 것 같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에 본인의 전문성이 너무나도 부족한 분야여서 결국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통일부 폐지 얘기까지 나오다가 결국은 통일부를 존치시켰지만 무력화 시키고 외교부가 독주하는, 겉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는 체제인데 실제로는 외교부가 독주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상당히 우왕좌왕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데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보다는 국내정치에 대한 고려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사람 문제로 넘어오면 여러 전문가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너무 미국 중심적이고 중국이라든가 일본, 러시아 쪽에 대한 고려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 그냥 자원외교의 한 부분 정도로 고려를 하는 것 같고, 중국도 중국과의 관계를 더 진전시키면 미국이 싫어 할 것 같으니깐 유지를 시키자, 유보를 시키자는 생각이 강합니다. 일본은 미국 쪽이랑 같이 생각을 해 본다면, 한·미·일 공조가 중요한데 역사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물어버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고 하면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식으로 좀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 구성도 너무 미국 쪽만 중시할 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남북관계 전문가들도 포함시켜서 좀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조직 체계도 제 생각에는 사령탑을 하나 뒀서 조율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연철

아까 잠깐 지적하신 거 같았는데 대일정책에 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기호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선진외교 그러니까 이명박 외교를 디자인 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깐 전체적으로 학자들 정권브레인들, 그리고 관료들 간에 조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부채환 상태거든요. 정권이라는 것은 처음에 정권에 공유하고 또는 디자인하면서 여러 가지 연관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에 반드시 목표를 세우고 결국은 거기까지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정권이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끝나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유효기간을 3년 정도로 본다면 그걸 일관되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체제가 빨리 갖춰져야 된다고 보고, 한일관계를 본다면 특히 상대방을 고려한다면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하고 중국은 대통령이라든지 외교부 중심에서 정책결정구조가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백악관하고 또는 담당 관료들 위에서 상당히 공동으로 움직이는 자국이라는 게 있는데 일본 경우에는 상당히 의외 같습니다. 상당히 관료들도 세지만, 기본적으로

로 일본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의원외교가 중요하거든요. 적어도 5선 6선 되면 또는 7~8선 하게 되면 외상을 하게 되고, 적어도 4~5선 되면 여러 가지 기반을 갖추다가면서 한 5~6년 뒤에는 외무교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일본에서 정치개혁이 이루어져 가지고 실제로 예전에는 대신과 정무차관만 있었는데 지금은 부대신 2명하고 정무관 3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깐 국회의원 5명이 들어와서 관청을 성청을 지도하는 의원과 위가 새겼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수상관저의 파워도 세졌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의원외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독도문제 같은 경우도 원래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명기하는 권한은 교육국장에게 있습니다. 국장전결입니다. 원래 그대로 한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수상이나 외상 또는 정무관들 대신들이 commit할 사항은 아니 예요. 그게 어떻게 결정 됐냐면, 결국 이게 외교문제로 확대되는 것은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후쿠다 수상, 코무라 외상 그리고 문무 과학상까지 세 명이 심야까지 회동하더니 결국은 결정이 됐거든요. 한때는 독도명기가 빠졌다가 결국은 들어왔다고 합니다. 국회의 압력들에 의해서이고, 그러니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전 재미있는 게 중의원에 문교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깐 우리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회입니다. 거기에 한·일연맹이사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한일의원연맹의 소속 의원들입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한국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 한국 입장을 들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도 했어요. 가장 양국관계를 잘 알고 이 관계를 조정하고 중간에서 코디네이터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앞장서서 한 거 예요. 그런 면에서 문제는 그 쪽은 한번 당선되면 10년 20년간 계속 국회의원 하는데 우리는 뭐 지금 이번에 아시다시피 전부 다 물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깐 3선 이상 중에서 일본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이런 의원외교가 예전에는 뒤의 흑막이라고 해서 김종필이나 문희상이 모리수상하고 핫라인을 가동하는 식의 그런 관계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문제는 일본사람들은 아는 사람들 아니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신뢰감이 쌓는데 5년 10년 걸리거든요.

### 김연철

의원내각제 국가들과의 외교라는 것은 의원외교,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거죠. 중국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데요.

### 이남주

중국은 몇 십 년씩 담당자가 계속 같은 일을 종사하고 있는 반면 이쪽은 순환보직으로 계속 담당자가 변화하는 문제나, 외교라인의 구성이 지나치게 미국에 편중된 문제 등은 항상 존재해왔던 문제입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한중관계의 수통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과 중국 양측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한국과의 관계를 처리하는데 public diplomacy가 굉장히 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국이랑 중국이랑 외교적 관계를 보면 외교관계의 깊이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양국관계는 1992년 이후 완전히 새로 시작된 것이지요. 미중관계의 예를 들면 전쟁까지 치른 나라라 양국관계가 완전한 단절에서 새로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1972년에 닉슨이 베이징을 방문하여 정상화에 합의하고 1991년 1월 1일자로 외교관계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UN대사로 나가있었고 외교부장을 역임하였던 황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1930년대 에드가 스노가 연안을 방문하여 “중국의 붉은 별”을 집필할 당시 연안에 통역으로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예는 매우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이러한 것이 양국관계의 두께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중일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중관계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을 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양국이 사실 외교관계의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이기보다는 현실적 이익을 서로 교환하는 관계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한국에 public diplomacy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라인에다만 초점을 맞춰서 한국과의 관계를 처리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한국 쪽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런 정책결정 라인들이 만났을 경우에는 양측의 신뢰가 그다지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익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관계이니까요.

그래서 이 한중관계에서의 외교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구조문제에서 당초에 서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으로 보면 양쪽에 다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정책결정이 필요한 데에만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지 당장의 정책에 도움은 아니지만 이후에 양국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는 노력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우가 양쪽에 유학규모가 굉장히 큼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관리가 양쪽 모두에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중국에서도 한국유학생에 대한 관리가 하나도 없고 그냥 돈이죠. 한국에서도 중국에서 온 유학생에 대한 관리는 지금 보게 되면 거의 돈이죠. 대학에서 보면 가서 등록금 내면 되고, 장학금을 일부 주지만 그것에 대한 체계적인 작업도 없는 거 같고 유학생 규모는 큰데 양국관계의 발전에 그다지 긍정적인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은 반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현재 한국에 많은 중국 유학생이 생활하고 있고 방송 등에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와 행위는 이들에 의해 바로 대륙에 있는 중국인들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종종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반중, 반한 감정을 부채질 하는 것이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들이 그것을 부채질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김연철

이제 구조와 사람관련해서는 가장중요한 부분이 대북정책 그 부분 인 거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기에는 그 핵심이 'ABR' 아닌가. 노무현정부에 대한 강박관념에 가까운 차별 이런 부분들이 정책의 구조화라든가 아니면 사람 특히 직업공무원에 대한 정치보복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이정철 박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철

외교안보통일이라는 게 대체로 국내파와 국제파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외교안보통일을 국내파가 하는 것은 촌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사실은 그 국가의 이익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는 그 균형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균형을 생각 안 하는 거 같고 뭐 부처 구조를 보면 통일부하고 외교부가 서로 견제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외교부가 독립건물을 가져야 된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외교부 건물에 통일부가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은 상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좀 큰 거 같고요, 외교부 산하에 통일부, 외교부 출신의 통일부장관, 뭐 이런 문제들이 제일 큰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로 되어있는데 대북정책도, 대통령이 원래 임기 초에는 버티고 임기 말에는 레임덕 때문에 쫓기고 이런 거거든요. 당연히 남북관계도 노무현정부도 그랬지만 임기 초에는 뭐 급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임기 말에는 또 자기 임기 내에 뭘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러는데 그 균형을 보좌관이나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게 더 문제인거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실 통일부가 저렇게 되면서 다 정리가 되고 있고 어느 대통령이든지 특히 야당이 대북라인에 투명성 얘기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투명한 대북라인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대북라인이 투명해 지면 대북라인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걸 뒤집어 보면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라인을 우리 정책결정을 북쪽에서 한다고 서로 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라인을 정리시키는 거나 아니면 사실은 국정원이 주도하거나 이 두 가지 상황밖에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국정원이 주도하는 것은 언젠가는 깜짝쇼로 대북정책을 하겠다는 거고. 그것은 결국은 밀사나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한 정책을 스스로 뒤집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투명성을 지키면서 이런 상태로 간다는 얘기는 남북관계를 안 하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되고, 그런 딜레마에 빠트리는 거 같아요.

### 김연철

제가 조금 덧붙이면 지금 핫라인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저번에 미국 방문했을 때 연락사무소 개설 이런 것처럼 주로 대북 제안이라는 게 대화의 형식에 관련된 문젠데 실제로 그런가? 사실 알고 보면 핫라인이라는 것도 통일부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지금 라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라인을 통해서 전달할 내용, 그게 뭐 6.15, 10.4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남북관계에 대한 시각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은데 내용에 대한 동의 없이 형식에 대한 제안을 자꾸 하다보니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불신을 증폭시키는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할 시간입니다. 저도 토론을 하다보면 주로 이명박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보면 아 이게 3달 밖에 안 됐다 아직 6개월 밖에 안 됐다 아직까지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좀 지켜봐 달라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에 갖고 있었던 실수나 오류나 이런 부분들을 전개를 해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이런 논리예요.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의 전망이나 제언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원혁

소수 의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은 그렇게 이념적으로 경직된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좁은 인재풀을 활용하여 거의 이상론적인 정책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지난 6개월 동안 쇠고기 파동이나 독도문제 등을 겪으면서 외교가 선의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낀 부분이 있고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동북아에서 분단된 가교국이기 때문에 한 쪽만 강조하다 보면 다른 쪽과의 관계가 소원해 지고 결국 우리나라의 국익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미국과 일본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씩 학습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조금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강산 사건 이후 대통령 연설에서 사실은 관광객 피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증진시키자는 얘기를 했고,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까지 다 동원을 해서 물어가기는 했지만은 6.15나 10.4공동성명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해보자는 부분이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깐 지난 6개월 동안의 학습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표방했던 한미동맹 강화 위주의 통일외교안보정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촛불시위를 경험하면서 핵심지지층 20%정도 되는 유권자도 놓치면 진짜 큰 일 난다고 하면서 우리사회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성향 유권자 위주로 가게 되면 점점 더 중간유권자들한테서 멀어지면 정책방향이 이상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자신은 경직되어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11월에 미국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될 텐데 부시행정부 이후에도 미국의 대북정책은 6자회담을 통해서 핵 폐기와 관계개선을 동시에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특히 오바마 후보 쪽에서는 부통령 후보로 바이든 상원의원을 지명했고, 바이든 상원의원의 보좌관으로 지난 몇 년 동안 북한도 방문한 경험도 있는 프랭크 자누지 같은 사람이 있죠. 비핵·개방 3000도 상생 공영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대북정책도 정리하게 되면 저는 향후 전망은 지난 6개월 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 이남주

저도 외교관계라는 것은 상당히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영향에 대해서 많이 자유로울 수 없을 거 같아요. 한중관계를 들면 한중관계도 기본적으로는 경제교류의 규모라든지 인적교류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면 어쨌든 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관계지 깰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문제나 영토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본과의 관계에서처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어도 같은 경우는 영토문제가 아닌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되어있는 것이고 다른 문제들도 현재의 국가정체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중관계는 사실은 어떻게 뼈거덕 거리든지 상당히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한 가지 지금 교류의 발전 속도를 따를 수 있을 정도의 상호신뢰와 이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겠지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 한중관계를 포함해서 외교관계를 한국정부가 잘 풀고 일정한 주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잘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풀리면 중국관계도 적극적인 방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인데, 지금처럼 기존의 합의된 프로세스와 어긋나는 대북정책을 가지고 한국정부가 주도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양기호

저는 한일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경제문제라든지 그리고 한일 간의 민간교류 또는 상호신뢰 같은 것은 굉장히 소중한 한국의 외교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잘 되면 독일 프랑스식으로, 예를 들어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독일, 프랑스 동맹을 거의 결혼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외교관이 어떤 유럽 또는 세계를 글로벌 하는데서 전략을 짜면 반드시 독일을 의식을 보게 되고요. 실제로 프랑스외교관이 독일에 많이 파견 돼 있고 독일외교관들이 뭐 1/3이 외국여성, 이 가운데 절반이 프랑스여성과 결혼한다든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한일관계 라는 것은 독불 동맹 가까운 상태가 지양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한일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독도문제를 역사문제라고 해서 한국정부가 너무 집착해가지고 한일관계에서 그 다음에 플러스알파를 만들어 내지 못할 경우 중국은 일본하고 이야기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을 패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회적 경험만 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려면 한일공동에 새로운 플러스알파 공동의 에너지를 창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한일관계가 가장 좋았던 때는 김대중, 오부치정권 때입니다. 그 때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 나왔고 올해 사실 10주년이어서 거기서 상응하는 문구가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10월인데 사실 지금 현실은

어떠냐면 10주년을 어떻게 해 가지고 한일관계를 발전시킬 가가 아니라 9월말 10월쯤에 고등학교교과해설서에 독도가 기재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지금 올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깐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깐 저는 어떤 면에서는 문화교류측면에서 올해 삼 년째 일본의 마쓰리축제가 서울시청 앞에서 9월 달 말에서 10월초쯤에 하거든요. 우리는 문화수출하고 있느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태왕사신기, 황진이가 인기가 좀 있습니다만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경도청 앞에서 한국마쓰리 열어야 됩니다. 같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 중인 게 한일우주개발공동연구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실 할 일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선진외교에서 지향했던 어떤 동아시아 아프리카형 글로벌 ODA 얘기를 한다면 그건 전부터 한일 공동으로 해 가지고 에너지도 개발하고 외교도 마찬가지로 같이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보고, 그런 새로운 공통의 지향점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독도문제 야스쿠니 문제랄지 다시 풀려나 버립니다. 그러니깐 지금은 올 하반기 중에 그런 새로운 어떤 공동의 합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연철

그 대일무역적자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양기호

저는 그걸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에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소기업을 유치하면 그 기업이 옆에 연계된 기업하고 시너지 효과가 나와되는데 굉장히 고립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중소기업 유치해가지고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미미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유일한 대안은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일본에서 수입해가지고 더 많이 파는 수밖에 없다 극단적인 얘기라 한다면, 그렇게 얘기 하는데 아무튼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한국정부가 너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말하자면 제도를 규제완화 하는 것이든지 지금 이명박정부에서 4년 걸릴 것을 2개월 3개월 걸려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규제완화도 그렇고요. 그리고 비즈니스프렌들리 한다니깐 장소는 많이 있거든요. 송도도 마찬가지로 뭐 자유경제구역, FTA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면에서 투자의 공감대를 적절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지금 어떤 면에서 한일관계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정철

일단 이명박정부가 4강외교와 남북관계를 좀 동등하게 볼 수 있으면 잘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올해는 실기한 것 같습니다. 북한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올해 실기한 게 내년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 거 같고요. 근데 정세를 보면 올해 미국에 선거가 있으니 내년 1년 동안 미국이 대북정책을 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또 우리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푸는 입장이므로 미국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할지 방향을 못 잡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돼버려서 내년도에 어떤 정책을 세우지 못하면 이제 남북관계는 냉전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왜냐면 내 후년에 지자체 선거 있거든요. 지자체 선거 있고, 바로 국회의원선거 그 다음에 연속으로 되면 지자체가 독자적인 대북정책들을 쓸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청와대에서 남북관계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이 깨질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또 청와대는 남북관계에 소극적이며 그런 정책 장악력으로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구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만 대북정책이 없는 게 아니라 이명박정부가 김영삼 정부시절의 우를 범할 가능성이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년 상반기에 뭔가 남북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정동영장관이 남북관계를 복원시켰던 그 프로세스 같은 것들 그런 의지가 드러나려면 올해 하반기 10.4정도에서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의 메시지가 북쪽에 전달이 돼야지 내년에 실질적인 정책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까지 넘기면 남북관계가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연철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될 거 같은데요. 요약하면 일단 한반도 정세가 과거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달라진 측면들이 있는데 달라진 정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외교나 대북정책에서 사실 말은 실용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보면 이념적 접근이 과도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구조나 사람과 관련해서 좀 더 보강해야 될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정책조정체계 관련해서는 과거 외교안보체계의 복원 부분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보완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교나 대북정책에 관련해서 너무 단기적인 여론에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사실은 외교정책에 여론이라는 것은 중장기적인 측면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랄까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